

배포 일시	2023. 1. 12.(목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흥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건설현장 불법행위, 공공공사현장부터 근절한다

- 원희룡 장관, 공공기관장 간담회 열고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'공공기관 CEO 간담회'를 개최하였다.
 -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'공공기관 CEO 간담회'에는 주택·도로·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·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*하였으며,
 - * (참석기관) 한국토지주택공사·서울주택도시공사·국가철도공단·한국도로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, 서울·원주·대전·익산·부산 국토관리청
 - 간담회가 진행된 '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'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되어 24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 재개된 현장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.
- 이번 간담회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현장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건설노조의 만연한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해서,
 -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< 공공기관 CEO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: '23. 1. 12. (목) 11:00~12:00 / 경남 창원 명곡 행복주택 현장
- 참석자
 - (국토부) 장관, 건설정책국장, 서울·원주·대전·익산·부산 국토관리청장, 대변인
 - (공공기관 등)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사장,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, 국가철도공단 이사장,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, 경기도시주택공사 주거사업본부장,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, LH 서울·경기남부·대전충남·광주전남·경남 지역 본부장

< 주요 논의내용 >

- (불법행위 엄중대응) 먼저,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▲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·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, ▲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·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.
 -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,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도 적극 대응한다.
 -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,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.
- (상시관리체계 마련) 이를 위해, 각 기관별로 본사-지역본부-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.
 -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·조직을 보강하는 한편,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민·형사 대응을 지원한다.
 - 지역본부는 본사-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, 국토부,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·관·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.
 - 아울러,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이 중심이 되어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,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즉시 전파한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된 민·관·공 지역 협력체계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·원주·대전·익산·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1월 11일 신설하였다.
 -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, 17개 시·도, 고용노동부 지청, 공정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 **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·단속, 불법행위 신고·접수·처리(고발 등)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,**
 - 앞으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**공공기관 지역본부도 참여할 예정이다.**
- (**예방·공정문화 조성**)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**불법행위를 예방하고,** 나아가 **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.**
 - 각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, 신고 방법, 익명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**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**
 - 또한, 현장감독관 등 소속 직원에게도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,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**내부 평가기준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독려한다.**
- (**세부 시행방안 수립**) 각 기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.

< **원희룡 장관 발언** >

- 원희룡 장관은 “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본연의 업무와 기관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**건설현장의 무법과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비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**” 면서,
 - “공공기관부터 **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,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**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, “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,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님들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” 임을 거듭 강조하며, “국가가 존재를 회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” 고 밝혔다.

